

광주 자치구 재난부서 방재안전직 고작 11%... '전문성 구멍'

광주지역 자치구 재난·안전 담당 부서의 방재안전직 비율이 정원 대비 10%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재난 대응 체계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재난·안전 부서 정원 총 100명 가운데 방재안전직은 11명(11%)으로 집계됐다. 재난 대응을 책임지는 부서의 전문 직력이 10분의 1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각 구별로 보면 동구 주민안전담당관 정원 17명 중 3명(17.6%), 서구 안전총괄과 17명 중 2명(11.8%), 남구 19명 중 3명(15.8%) 등이다.

광산구는 안전총괄과 20명 중 2명(10%)에 불과하고, 북구 안전총괄과는 27명 가운데 방재안전직은 1명(3.7%)으로 전문 직력 공백이 가장 컸다.

방재안전직은 재난예방 계획 수립과 시설물 안전점검, 위험물 관리, 비상근무, 사고 수습 등 전문성과 경험, 빠른 판단 등을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자치구 대부분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재난·안전 분야 업무를 일반행정직이나 건축직, 토목직 등이 이를 대신하는 상황이다.

재난 대응은 초기 판단과 대응 속도가 핵심인 만큼 전문 직력 부재는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올 여름 '극한호우'를 비롯해 대형화재, 건축물 붕괴 등 돌발적인 재난이 반복된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 방재안전직 부족으로 일반직이 재난 대응 업무를 맡으면서 부담감과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야간·주말 비상근무부터 긴급 현장 대응, 피해 조사 등 고강도 업무가 겹쳐 부서 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게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올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수해 등 잇단 재난이 발생한 광산구의 경



광주시 '2024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사진=광주시청제공

북구 정원 27명 중 1명으로 3.7%... 광산구도 10%

일반직 중심 대응 고작 "전문 인력 없는 재난 행정"

자연·사회재난 복합적 발생에 '대응력 저하' 우려

전문가 "부담감·근무 여건에 기피 현상, 개선해야"

우 1~9월 담당부서 직원 병가 전년 14건에서 23건으로 늘었고, 병가 사용시간도 86.5시간에서 768시간으로 급증했다.

방재안전직은 지방직 중에서도 '기피 직렬'로 꼽힌다. 재난 대응 업무가 상시 비상대기 체제인 데다, 사고 발생 시 감사나 처벌 등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인력 선호도가 낮다 보니 신규 총원도 더디고, 소수 직렬 특성상 승진 여건도 좋지 않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예산과 정원 배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

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의 방재안전직 인원으로는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 한 자치구 재난 담당 공무원은 "지금 구조에선 큰 재난이 발생하면 부서 전체가 체력, 정신적으로 한계에 내몰린다"며 "이상기후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늘고 있어 담당자 부담은 더 커졌다. 최소 정원의 30%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정원 20~30명 규모 부서에 전문직력이 2~3명 수준이면 사실상 재난 대응 전담부서라고 하기 힘들다"며 "자연·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체계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전문 직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방재안전직을 채용해도 지원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기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이나 포상, 급여 등 각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 안전에 대한 의식과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수당을 월 최대 24만원 인상하고, 승진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는 등 조직 재편 모델을 지자체에 권고한다는 구상이다. /오권철 기자

광주시, '올해의 베스트10' 후보 정책 발표

군공항·복합쇼핑몰·AI도시 등 주요 현안 포함
설문·현장평가리더 평가 등 1만2279명 참여

광주시가 지난 4월 온라인 설문을 시작으로 '시민의 날' 현장평가, 지역 사회 리더 평가 등 시민 1만2279명이 참여한 정책평가를 통해 '올해의 베스트10' 후보 정책을 선정, 16일 발표했다.

후보 정책으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조성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군3과 공공의료 강화 ▲AI중심도시 광주 ▲광주천 수질·악취 개선 등 5대 분야 주요 정책이 뽑혔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무안군민의 이전 찬성 여론 변화와 대통령실 주도 6자 TF 회의가 연내 개최될 예정이다. 복합쇼핑몰은 '더현대 광주'가 2028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오는 20일 착공을 앞두고 있고 신세계백화점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통합돌봄은 시행 3년차로 돌봄·요양부터 의료방문까지 확대돼 전국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했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AI중심도시 광주는 국가 AI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도시 전체 규제 프리 실증도시 조성, 국가 NPU 컴퓨팅센터 건립, AI연구소 유치 등 AI산

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천 수질·악취 개선사업은 제4수원지 등을 활용한 하천유량 확보, 하수관로 정비, 광주천 주변 악취 근원지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올해 정책평가는 부서별 대표정책 65건을 대상으로 4월 온라인 설문을 통해 1차 31건으로 압축한 뒤 5월 시민의 날 현장평가, 10월 지역사회 리더 평가를 거쳐 10건의 최종 후보정책을 확정했다.

10월 리더 평가에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4830명이 참여했고, 5월 시민의 날 행사에선 1409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2400명이 부스를 방문했다.

시는 12월 초 '2025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열어 시민평가단(300명)과 전문가평가단(30명)의 심사를 거쳐 올해의 베스트10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평가 박람회는 1년에 4라운드를 진행해 일반 시민과 통장, 자치위원, 교수 등이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며 "이를 통해 시정책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시교육청, 21~22일 'AI광주미래교육 박람회'

'인공지능시대, 상상을 현실로' 주제... AI 활용 수업혁신

광주시교육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AI광주미래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 시대, 상상을 현실로'를 주제로 AI광주미래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수업 혁신 사례와 에듀테크 활용 방안을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람회는 소설가 김영하 작가의 'AI시대, 인간다움과 창의성' 주제 강연과 한양대 한재권 교수의 '로봇과 함께할 세상' 특별강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광주형 미래교실 AI팩토리를 설치해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실현하고 듣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부문에서는 이한솔·류승현 교사의 '역사 퀴즈 챔피언십을 통해 배운 내용 확인하기', 중학교 부문에서는 박재실·박혜인 교사의 '거리 변화에 따른 빛의 세기 실험 설계하기', 김은지·유화선 교사

의 '존중하는 글쓰기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내용 조작하기' 등을 실연한다.

시교육청이 개발한 광주아이온(AI-ON) 부스도 별도로 마련해 AI와 디지털을 활용한 학생 맞춤 수업을 체험할 수 있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 60여 곳도 박람회에 참여해 AI, 에듀테크 관련 부스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전시·체험 부스 참여 스탬프 3개 이상을 찍고 설문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는 교사와 학생, 시민이 함께 미래교육의 변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AI와 인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광주형 미래교육 모델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전남대, 교육부에 사서교사 양성 인원 확대 요구

사서교사 배치율 광주 0.11명·전남 0.14명

교육부 '교사 정원 늘어난다' 이유로 반대

광주·전남 사서교사 임용 선발 인원은 최근 8년 동안 평균 20명인데 반해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한 곳에서만 2023년 80명, 2024년 76명에 달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남대 교육대학원에 사서교육 전공을 신설하면 교사 양성 정원이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남대는 대학 내 교육대학원이 자체적

으로 갖고 있는 교사 양성 정원 내에서 사서교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광주·전남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타 지역에 비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대 학생들은 최근 교육부 앞에서 지역 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남대를 차별하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교육부의 갑질을 설명하며 정책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교육대학원에 사서교육 전공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교사 정원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16일 전남대에 따르면 문헌정보학과 학생과 대학원생들은 광주·전남지역 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이 저조해 교육대학원에 사서교육 전공(5명) 신설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은 광주가 0.11명, 전남이 0.14명이다. 올해 광주·전남의 대학 사서교사 양성 인원은 총 5명으로, 교육대학원을 통한 양성 인원은 0명이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